

경제 규제혁신 TF 경제부총리 모두발언(6.7)

- 지금부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최근 IT 경기 위축 심화 등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, 투자심리 저하로 설비투자 부진*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
 - *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(5.25일, 한국은행): ('22) △0.5% → ('23)△3.2%
- 이에 정부는 조속한 수출 반등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반도체·K-콘텐츠 등 분야의 수출역량 강화를 포함한 30개 이상의 수출 대책을 마련·추진 중이며,
- 금년 중 총 3차례 경제 규제혁신 TF를 개최하여 이차전자·바이오 등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, 외환·조달 등을 포함한 경제 쏠분야의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오늘 회의에서는 ❶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❷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.

[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]

- 먼저, 이번 경제 규제혁신을 통해,
공장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하여,
총 3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고,
- 원산지 인증절차, 보세공장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절차 등 관세행정 편의를 제고하게 되었습니다.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면,
- ❶ 세종시 농공단지내 공업용수 지원, 울산 산업단지내 입주요건 개선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및 공장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.

- ②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와 관련, 軍의 작전수행 관련 동의기준에는 최근의 해상풍력 발전기 대형화 추세가 반영되지 않아 상당수 인허가가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

- 이에 레이더 차폐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軍 작전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대형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, 해상풍력 발전사업* 투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.

* '30년까지 총 1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계획·추진 중(산업부, '20년)

- ③ 아울러,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능력을 인정받은 수출기업*에 대해서 품목별로 상이한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하여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* 품목별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취득 후 5년 단위로 유효기간 연장

- ④ 한편, 외국인 학원강사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달리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었으나, 온라인 외국어 교육의 경우 내국인 학원강사와 같이 대학 3학년 재학이상 등으로 개선하여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투자 1,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
[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]

□ 다음으로,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입니다.

□ 정부는 그간 ①화학물질 등록 및 관리체계 개편('22.8), ②반도체 특화기준 마련('22.12) 등 국가경제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.

□ 다만,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복잡한 행정절차·기준 준수, 전문 인력 확보 부담 등이 제기되고 있어, 이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화학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- ❶ 먼저, 실내 보관시설 내에 분진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의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,

* (현행) 고체상태 물질(납괴 형태로 보관 밀폐 포장 등)을 보관하는 경우에도 환기설비 설치 의무

-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화학물질의 본래 명칭 대신에 대체명칭(총칭명)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*하겠습니다.

* (예) 유해성심사 목적 자료 제출시 유해화학물질 구성요소(예: ethyl 2-propenoate)를 포함한 경우 (現)대체명칭 불가 → (改)잔류함량 0.1% 미만시 총칭명(alkyl[C=1~6] alkenoate[C=2~8]) 가능

- ❷ 금지물질 수입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환경부에 수입허가를 받으면 고용부 수입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일원화·간소화하겠습니다.

- ❸ 또한, 중소기업 화학물질 안전 관련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'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었던 영세사업장(30인 미만)에 대한 기술인력 자격 완화기준* 유효기간을 '28년 말로 연장할 계획입니다.

* 기사자격증 취득 +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 등 / 다만, 영세사업장에 한해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과정 이수를 기술인력 기준 충족으로 간주

[향후계획]

- 오늘 발표한 과제들은 기존 과제들과 함께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.

- 또한 향후에는 기업 유치,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지자체 사업도 적극 발굴·개선하여

-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-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